

특집논문 불안계급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 불안계급 이론의 비판과 확장*

Precariz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ity:
A Critique and Extension of The Precariat Theory

박인권**

이 논문은 불안계급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하여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불안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론화하고, 한국 도시의 분석에 이 개념들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론적으로 ‘배제’ 개념이 불안계급 이론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소비와 재생산관계에서의 불안정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임을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실제로 사회적 배제와 공간적 배제가 이들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을 확인시켜준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참여의 부족과 상호의존적 사회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공간적 차원에서는 공간의 상품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과정이 지대의 상승, 주거지 분리, 공공 공간의 축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배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여 불안계급 형성의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배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의지와 공동체 활동 및 연대의식을 약화시켜 계급의식의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배제의 극복이 사회적 약자의 불안정성 극복과 이 집단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불안계급, 사회적 배제, 공간적 배제, 포용도시

* 이 논문은 2015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부교수(ikpark@uos.ac.kr)

1. 서론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이 위태롭다. 이들은 생산관계에서는 실업과 고용 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낮은 복리혜택으로 인해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린다(Standing, 2011). 직장 밖으로 나와서는 주거 불안정, 사회관계의 단절, 각종 의사결정과 공동체 활동 미참여로 인해 생산관계에서의 불안정성(precaarity) 그 이상의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도시에서 벌어지는 개발과 재개발 과정은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발달된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한때 선진국에서는 포드주의 체제 하에서 복지국가의 확장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는 듯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발호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다시 후퇴하고 있다(Fainstein, 2010; Harvey, 2000).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항하는 저항이 시작되었다.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던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밀라노, 바르셀로나, 파리, 런던, 함부르크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확산되고, 규모도 점차 확대되었다. 이들이 거리에서 외친 구호는 “불안정성을 멈춰라(Stop Précarité)!”였다(Munck, 2013: 753). 이 운동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반대하고 불안정한 노동과 삶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도 ‘유로 메이데이(EuroMayDay)’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이 운동은 2005년에는 유럽의 18개 도시로 확산되었고, ‘유로메이데이 네트워크’라는 국제적 연결망으로 조직화되었다(Banki, 2013; Lorey, 2010; Neilson & Rossiter, 2008).

이처럼 유럽의 도시들에서 노동의 불안정성에 저항하는 운동이 확산되자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하나의 ‘통일된 사회 행위자(unified social actors)’ 혹은 ‘새로운 계급’으로 인식하려는 학술적 움직임이 나타났다(Jørgensen, 2016). 이런 배경 속에서 사회학자 스탠딩(Standing, 2011)이 ‘불안계급(Precariat)’이라고 명명하면서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이 이론은 고용과 생산관계를 통해 어떻게 불안정성이 만들어지는지, 이를 통해 불안계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Munck, 2013). 일용직,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표되는 불안정한 노동은 삶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할 것이다(정성진, 2013).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사회학과 사회철학 분야에서 이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의 상황에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 불안계급 이론을 소개하고 ‘해방정치’의 관점에서 의의를 살펴본 연구도 있고(이광일, 2013), 불안계급 개념을 이용하여 노동계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이진경, 2012). 스탠딩이 불안계급 논의를 전개하면서 실천적 과제로 제시했던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한 연구들도 있다(강남훈, 2013; 광노완, 2012). 이들 연구들도 외국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주로 고용과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약자들 삶의 불안정성을 고찰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와 재생산의 공간으로서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 삶의 불안정성은 생산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Castells, 1977). 고용과 생산관계가 삶의 물질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와 재생산관계를 통해서도 삶의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도시 빈민 밀집지역이 재개발되면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승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폐쇄적 아파트 단지 위주로 개발이 이뤄지면 공터, 골목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사라진다. 공동체 활동이 줄어들면 소속감이 줄어들고, 고립감,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성도 증가한다. 불안계급 이론은 이러한 소비와 재생산의 영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불안정성의 지리적 차원을 논의한 연구들이 일부 있으나(Banki, 2013; Waite, 2009), 지역사회의 사회적 과정과 도시개발과 같은 도시과정

(urban process)이 불안정화(precarization)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와 재생산의 공간으로서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불안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론화하여 불안계급 이론의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 논의에 주목한다. 사회적 배제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각종 자원 및 기회의 배분으로부터 제외되고, 각종 의사결정 과정과 공동체 활동의 한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사실 불안계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취약성과 그러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왔다(Munck, 2013). 한편 포용도시의 개념은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분석적 도구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비전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박인권, 2015). 이들 개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이 결핍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과 사회관계에 주목하는 동태적·관계적 개념으로서 도시에서의 불안정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필자는 이들 논의로부터 사회적·공간적 배제 개념을 가져와서 이것이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화 과정의 핵심적 위치에 있음을 이론적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 마련된 개념 틀을 적용하여 한국 도시의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화 과정을 분석한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한국 도시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한 자료는 사회적 약자—청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도시빈민, 이주여성, 세입자, 노점상 등을 대표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구하였다.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2절에서는 불안정성과 불안계급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 이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학술적, 실천적 유용성을 고찰한다. 3절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불안계급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과정, 즉 불안정화 과정을

이론화 한다. 불안정화 영역으로서 도시의 특성을 살펴보고 불안정화 과정을 사회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렇게 정립된 도시에서의 불안정화 과정에 대한 개념의 틀은 이어지는 부분에서 한국의 도시에 적용된다. 4절에서는 한국 도시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성을 분석하는데, 고용 및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함께 고찰한다. 5절에서는 3절에서 마련한 도시에서의 불안정화 과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한국의 도시에 적용하고, 6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맺는다.

2. 불안정성과 불안계급 이론

1) 불안정성과 불안계급 개념

불안정성(*precarity*)이라는 개념은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Jørgensen, 2016; Waite, 2009*). 그는 알제리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식민지 노동계급의 열악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이 개념(*précarité*)을 처음 사용하였다(*Bourdieu, Darbel, Rivet & Seibel, 1963*). 부르디외는 이 개념을 주로 ‘사회적 병리(*societal malaise*)’와 ‘불안전(*insecur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그 이후로도 이 개념은 일상적인 삶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나타내거나 노동시장 및 고용상태에서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¹⁾

1980년대부터 서유럽 등 후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전의 관행과 다

1) 버틀러(*Butler, 2004*)는 9·11 테러와 미국의 폭력적 대응이 미국 사회에 가져온 일상적 삶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의미하기 위해 불안정성(*precariousness*) 개념을 사용하였다. 한편 되르 외(*Dörre, Kraemer, & Speidel, 2006*)는 노동시장 및 고용상태의 불안정성과 극우 정치세력의 등장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이때 사용된 불안정성은 유동적 상태(*fluid state*)와 불안정이 일상화(*stabilization of instability*)된 고용상태를 의미한다.

른 비전형적인(atypical) 고용과 노동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비전형적인 노동은 언제 중단될지 모르게 불확실하고, 노동조건이나 작업속도를 통제할 수 없으며,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임금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Rodgers & Rodgers, 1989). 다시 말해 “불안정성, 보호의 부족, 불안전, 그리고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노동이다(Rodgers, 1989: 3).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은 비전형적인 것이었으나 오늘날 이러한 ‘특이한’ 형태의 노동은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있다(Waite, 2009).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불안정 노동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노동시장 규제가 약한 독일과 영국에서 노동자들의 빈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GUTIERREZ-BARBARRUSA, 2012).²⁾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에 이 개념은 주로 고용보다는 빈곤층의 열악한 상황과 연결되어 주로 사용되었으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른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나타나자 이 개념은 고용과 연관되기 시작하였다(Waite, 2009). 포드주의 시대의 빈곤층은 노숙자, 장애인, 사회 부적응자 등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였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열심히 노동하면서도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근로빈곤층이 나타나면서 고용 자체가 빈곤 및 불안정한 삶의 상태에서부터 탈출을 의미하지는 않게 되었다. 이 시기 불안정성은 주로 이러한 근로빈곤층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게 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출현은 이 시기에 대두된 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관련이 깊다(Standing, 2011; 2014a).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본과 시장의 자유를 최

2) 그러나 OECD 국가의 임시직 노동자의 비중은 1995년과 2004년 사이에 10%에서 12%로 약간 상승한 데 그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Munck, 2013).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2% 포인트 상승한 것이므로 일부 국가의 경우 그 상승폭이 훨씬 더 큰 곳도 있을 것이다.

대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자본의 노동에 대한 이용 및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포드주의 체제하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타협의 산물인 안정된 고용의 혜택이 약화되었다. 장기 계약과 고용에 따른 각종 복리 혜택을 보장하던 정규직 고용이 줄어들고 저임금, 단기 또는 임시 계약, 낮은 고용 복리혜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한 (precarious) 고용이 증가한 것이다. 세계화는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속화하여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과 자본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술이 없고 장소에 고착된 내국인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그들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졌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의 거시적 맥락은 하비(Harvey, 2003; 2004; 2007)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도시화론’ 주창자들에 의해서도 설명되었다(최병두, 2009; 2011). 하비는 ‘탈취에 의한 축적(accumulation by dispossess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신자유주의하에서 부와 소득, 그리고 권력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에서 소수의 지배 계급으로 흘러들어가는(channeling)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Harvey, 2007). 자본주의 초기에 시원적 축적을 위해 이뤄졌던 노동계급에 대한 강탈과 공유지의 사유화 같은 탈취가 현대에 자본축적의 위기가 도래하자 다시 시작되어 노동계급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에 대한 설명은 불안계급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불안계급 이론은 이러한 거시적 맥락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실업자 등과 같은 ‘아웃사이드’들의 실존적 상황에 집중하고 이들이 정치적 실천의 주체로 계급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이론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속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주체가 ‘불안계급(Precariat)’으로 호명된다. 스탠딩(Standing, 2011; 2012)은 노동의 상태를 나타내는 ‘불안정성’ 개념과 과거 대변혁(Great Transformat-

ion)을 이끌었던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개념을 혼합하여 불안계급(Precariat)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는 이 새로운 계급이 새로운 시대의 사회 모순으로부터 고통 받고 이 사회의 변혁(transformation)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지금 당장은 계급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으나 계급으로서 조금씩 형성(class-in-the-making)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안계급이 단기계약 또는 임시직 노동을 수행하고, 직업적 전문성이나 정체성, 소속감이 없으며, 시민으로서 법·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거류민(denizens)의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지위의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후기 자본주의 계급 계층의 가장 아래 위치하게 된다. 포드주의 시대의 계급 타협의 결과 안정적이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핵심노동계급(core working class)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스탠딩은 이들이 빈곤, 실업, 불안정성(precaarity) 등 세 가지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한다.

2) 불안계급 개념의 한계와 유용성

불안계급 이론은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실존적 주체의 문제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지만, 과연 불안계급을 새로운 ‘계급(class)’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Jørgensen, 2016). 어떤 집단이 계급으로서 규정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 시스템, 노동력과 사회의 재생산 시스템에서 특정한 공통의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데, 불안계급은 불안한 노동과 생활의 상태를 공유할 뿐 생산, 배분, 재생산 시스템에서 공통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Frase, 2014). 또한 계급은 어떤 집단 혼자만의 위치에 의해 정의되기보다는 다른 집단과의 적대관계(antagonistic relations)에 의해 정의되는 관계적 개념인데, 불안계급은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Munck, 2013).

불안계급은 생산 및 재생산 시스템에서 집단 간 관계, 공통의 역할 등

에 의해서 정의되는 전통적 개념의 계급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생산관계에서 임금, 계약기간, 복리혜택 등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노동계급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 의미는 너무 많이 축소되고 만다. 실제로 스탠딩은 불안계급을 노동계급의 일부로 국한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불안계급은 대체로 포드주의 시대의 노동계급이 누리던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부정적’ 개념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Munck, 2013). 따라서 누가 불안계급에 속하는지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스탠딩(Standing, 2014b)은 ‘형성 중인 계급’이라는 개념으로 다소 후퇴하고, 생산, 분배, 국가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들이 어떻게 계급으로 정의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제시한다. 생산관계 측면에서 이들은 불안정한 노동, 실업 또는 단기간 계약의 조건을 갖고, 불안정한 노동과 생활에 익숙해지는 불안정화(precairization) 과정을 겪게 된다. 또한 한 직업에 오래 있지 못하다 보니 직업의식이 없고, 직장 탐색과 이력서 갱신 등과 같이 노동을 위한 보상받지 못하는 일에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분배관계의 측면에서 이들은 다른 복리혜택이 없이 오직 봉급에만 의존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이 봉급도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그리고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부조 등 사회적 소득 또한 거의 없다시피 하다.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보장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시민적 권리가 없는 거류민에 불과하다.

그는 누가 불안계급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답하기 위해, 불안계급에 포함된 세 가지 분파를 제시하고 있다(Standing, 2014a; 2014b). 첫 번째 분파는 과거의 생산직 노동계급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로서 ‘과거지향인(atavists)’이라고 칭한다. 이들은 학력과 기술이 없고 과거 자기 부모들이 가졌던 안정적 고용과 혜택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민자나 소수민족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분파는 이주자와 소수 민족으로서 시민적 권리가 없는 거류민(denizen)으로서 ‘자기

구역 의식(sense of home)'을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어지간한 불안정성을 감내하면서 조용히 살아가지만 상황이 더 나빠지면 근본주의적으로 돌변할 여지가 있고, 정체성을 갈망하고 조국을 그리워하는 '향수인(nostalgics)'이다. 세 번째 분파는 잘 교육받은 젊은 청년세대, 또는 자기 자녀가 불안계급으로 전락하는 것을 걱정하는 봉급생활자(salaried)들이다. 이들은 미래가 없는 삶에 대해 절망하지만 '좋은 사회'를 꿈꾸고 진보적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 스탠딩은 형성 중인 불안계급에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전 연령대에 걸친 여성, 장애인, 복지 수혜자, 전과자, 이주자 등이 바로 그것이다(Standing, 2012).

불안계급 개념에 대한 비판과 스탠딩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불안계급 개념은 아직까지 분석적 사회과학 개념으로서 엄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계급이 갖는 독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급의 경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무엇보다도 계급으로서 정립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조건들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성원들이 자신을 계급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계급의식(self-consciousness as a class)'이 필요하다(Johnson, 2011). 하지만 스탠딩이 제시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들을 동일한 계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불안계급 개념의 유용성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프레이스(Frase, 2014)는 불안계급을 '계급'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들이 처한 '조건(condition)'과 관련된 개념으로 볼 것을 주문한다. 이 개념은 작업장과 생산관계에 근거를 둔 전통적 계급 개념이라기보다 작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조건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불안정한 노동이 시사하는 바는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작업장 너머(beyond the workplace)'의 세상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Frase, 2014: 13). 이러한 주장은 작업장에서 다시 포드주의 시대의 생산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불쾌하

고 ‘살인적인(deadening)’ 노동환경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짧게 지속된다면 건강보험, 탁아시설 등 각종 사회적 편익을 굳이 고용과 연결시킬 필요 없이,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보장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은 사회적 약자의 불안정성의 문제가 단지 생산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생산관계의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는 소비와 재생산관계 때문에도 나타난다는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불안계급 개념은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작업장과 직업이 달라 생산관계에서 하나의 계급으로 묶이기 어려운 다양한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힘이 있다. 조엔슨(Jørgensen, 2016)은 이 개념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항하는 정치적 실천의 주체를 ‘호명(interpellation)’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불안계급의 상태인 불안정성은 투쟁이 조직되고 통합되는 하나의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불안정성은 정치적 실천을 위한 공통성(the common)을 구성할 잠재력이 있는 “존재론적 경험이자 사회경제적 조건”이기 때문이다(Neilson & Rossiter, 2008: 55). 또한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불안정화(prekarization)를 통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성을 자각하고 정치적 단일세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불안계급으로 호명되는 순간 다양한 영역에 흩어져 있던 불안정한 상태의 집단들이 생산관계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공통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급적 동질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 근심(anxiety), 아노미(anomie), 소외(alienation), 분노(anger) 등과 같은 심리상태 때문이다(Standing, 2012).

요컨대 불안계급 개념에서 ‘계급’은 아직까지 이론적 엄밀성을 지닌 분석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주체를 호명하기 위한 실천적 수사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개념이 지닌 중요한 이론적 함의는 삶의 불안정성이 생산관계뿐만 아니라 소비 및 재생산 관계와의 조응 또는 비조

응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호명된 불안계급은 전통적 계급과 달리 작업장에서의 생산관계가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소비 및 재생산 관계를 통해서도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3. 도시에서의 불안정화 과정

1) 불안정화 영역으로서 도시

불안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와 달리 생산관계 또는 고용관계를 통해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은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정치적 투쟁의 장이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불안정화가 진행되는 다양한 삶의 현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전체 시스템의 모순적 과정이 공간에 표현된 축소판(microcosm)으로서 ‘도시’는 생산 현장의 밖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화가 일상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다(Saunders, 1986). 따라서 어떤 도시과정(urban process)을 통해 불안계급이 확대 재생산되는지, 불안계급은 도시에서 어떤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그간 불안계급 논의가 주로 생산관계 집중하고, 현대인의 삶이 조직되고 전개되는 ‘도시’라는 공간에 주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커다란 공백이다.

도시는 생산을 규정하는 공간 단위이기보다는 ‘집합적 소비’의 공간이자 재생산의 공간이다(Castells, 1977).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화보다는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화 과정이 전개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불안계급의 불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화 과정을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완화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하여 불안계급을 확대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야 한다. 불안계급 이론은 노동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불안정화

가 진행됨을 인정하면서도 주로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직장 밖의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화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화 과정은 생산관계에서 초래되는 불안정화 과정과 결합하여 불안계급의 불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킨다. 불안계급 이론이 잘 설명하듯 불안계급은 일단 생산관계에서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여 그들이 고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소득은 매우 낮고 불확실하며 불안정적이다. 만약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결핍과 불안정을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완화해줄 수 있다면 그들의 생활은 노동만큼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저렴한 주택, 대중교통, 공교육, 육아 시설,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등이 잘 갖춰져 있고, 지역공동체 내에서 상호부조와 협력이 잘 이뤄진다면 비록 임금소득이 낮은 사람도 나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반대로 이들 비생산 영역에서 주어지는 각종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은 생산관계로부터 연유하는 불안정성이 삶 전반으로 그대로 확장된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공간인 도시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이 생산의 영역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생산관계의 불안정성이 소비 및 재생산 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주거 안정과 고용 안정 사이의 관계에 관한 데스몬드와 헤어셴슨(Desmond & Gershenson, 2016)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강제 퇴거(eviction)를 경험한 노동자가 직장에서 해고 당할 위험이 11~22% 포인트나 더 높다. 주거와 같은 비생산 영역에서의 불안정성이 역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화는 불안계급의 불안정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불안정화 과정이 비단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은 소비 및 재생산 관계가 집약된 도시에서 불안계급의 저항과 투쟁이 전개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타협적 노조가 주

된 세력인 생산의 현장보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더 중요하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Frase, 2014).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주거 불안정은 고용 불안정만큼이나 중요하며, 교통시설의 접근성은 노동시장과 고용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화 과정은 불안계급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저항운동을 통해서 사회 구조 전체의 변혁을 한꺼번에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 운동은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과 수준에서 변화를 이끌어내어 사회 변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Fainstein, 2010).³⁾

그렇다면 도시의 불안정성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확대되는가? 이 글은 소비 및 재생산 관계의 집약체로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화 과정의 핵심은 ‘배제(exclusion)’라고 주장한다. 도시에서 배제의 핵심적 두 차원은 사회적 배제와 공간적 배제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변부의 불안정한 지위에 처한 집단들의 형성과 불평등, 이로 인한 사회통합의 결여를 설명하는 포괄적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 배제 이론은 불안정화의 사회적 차원을 설명한다. 도시에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도시비전으로 제시된 ‘포용도시’ 논의에서 강조하는 공간적 배제⁴⁾는 불안정화의 공간적 차원을 설명한다.⁵⁾ 이 두 가지 차원의 배제가 불안계급의 형성과정, 즉 불안정화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구체적 메커니즘을 살펴보자.

3) 도시에서 벌어지는 정의 운동(justice movement)은 다중스케일의 운동의 한 차원으로서 의의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 차원의 저항운동의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Nicholls & Beaumont, 2004).

4) 포용도시 논의에서는 배제의 대척점으로서 ‘포용’을 제시하여, 공간적 배제가 아닌 ‘공간적 포용’ 혹은 ‘공간적 개방’을 강조한다. 배제와 포용은 동일한 차원의 양극단에 있으므로, 공간적 배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포용도시의 공간적 포용 또는 개방의 차원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 포용도시의 공간적 차원에 대해서는 박인권(2015), 박인권·이민주(2016), 박인권 외(2017)를 참조.

5) 신자유주의 체제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화의 거시적 맥락은 하비(Harvey, 2003, 2004, 2007)가 주창한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적 배제와 불안정화

어떤 집단이 체계적으로 각종 사회적 관계와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현상은 사회적 배제로 설명된다. 사회적 배제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자원 및 기회의 배분으로부터 제외되고, 각종 의사결정 과정과 전체 공동체 활동의 한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권의 거부 또는 미실현”으로도 정의된다(Berghman, 1995: 19). 사회적 배제와 흔히 비교 대상이 되는 빈곤(poverty)은 한 개인이나 집단의 경제적 자원의 결여 상태를 나타내는 일차원적, 정태적 개념이다. 반면 사회적 배제는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결핍의 상태에 도달하는 동태적 과정, 그리고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집단에 의해 배제되는 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다차원적이고, 동태적이며, 관계적이다(Jehoel-Gijsbers & Vrooman, 2007). 이런 점 때문에 경제적 빈곤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의 비주류, 한계집단 등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Aalbers, 2010; Atkinson, 2000). 사실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부터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배제자(the socially excluded)’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어왔다(Munck, 2013).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 두 차원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참여(participation)로 요약할 수 있다(Gerometta, Häussermann & Longo, 2005). 상호의존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식적 계약 또는 사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는데, 사회적 배제는 이러한 관계가 결여되어 서로에 대한 “호혜적 의무, 수용, 인정, 그리고 연대” 등도 함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Gerometta et al., 2005: 2010). 어떤 사람이 일 자리를 잃고 노동분업이라는 공식적 상호의존관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사회적 배제가 되지만, 공동체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호부조의 네트워크에서 제외되는 것도 사회적 배제인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요구되는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여러 분야의 공동체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배제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이러한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도시계획 결정, 주민 투표, 마을회의 등에 참여할 권한이 없거나 권한이 있더라도 시간, 언어,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그 예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개선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회적 배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배제가 현대 자본주의 발전과정 속에서 심화되고 있다. 자본의 이윤율 및 성장률 저하 경향에 대한 대응으로 1980년대에 대두된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가 재정의 축소와 복지회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금융규제의 완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본의 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전략이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쉬운 방법은 각종 분배 및 재분배 혜택의 대상에서 일부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수혜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어떤 집단의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방법은 경쟁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Edwards, 1997; Lee, 1999). 집단 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서열화를 하고, 이를 근거로 차별을 함으로써 집단 간 경쟁을 부추기며, 그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서열화와 차별을 반복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열화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경제적 생산성이다. 언어소통이나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이주자나 장애인, 출산휴가와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필요 이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기술이 숙련되지 않은 청년 등은 정규직 노동자가 누리는 혜택에서 배제된다. 필자는 이러한 경쟁적 과정을 통한 배제를 ‘서열화(ranking)-차별(discrimination)-경쟁(competition) 연쇄’라고 부른다. 이 메커니즘은 한 번의 차별에서 끝나지 않고 이 차별이 또 다른 경쟁의 과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복적 연쇄이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분배에서도 이러한 서열화-차별-경쟁 연쇄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계속된다. 이 영역에 투입되는 재원도 결국은 생산의

영역에서 나와야 하고, 이는 곧 자본의 이윤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의 수혜대상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수혜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집단 간 또는 지역 간에 경쟁을 부추긴다. 장애인의 등급을 나누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어서 주택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비와 재생산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서열화-차별-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주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과 기준은 서열화의 기초를 제공하고, 이는 다시 차별의 근거로 작용한다. “사회적 노동분업, 의사결정권의 위계, 성 및 외모에 대한 관행, 물리적-사회적 공간상의 사람의 배열” 등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와 같은 서열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제도적 규칙과 관행, 지배적 규범의 작동, 경제적 정치적 인센티브의 형성, 과거의 실천 및 정책의 물리적 효과, 사람들 행위의 고정 관념적 가정” 등은 모두 차별의 기제로 작용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Young, 2007: 83).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받게 된다. 물질적 차별뿐만 아니라 차별적 시선, 사회적 낙인 등과 같은 비물질적 심리적 차별도 그들을 괴롭힌다. 이러한 차별이 일상화되면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되고 사회관계로부터 멀어지고 스스로 고립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는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불안정화(prekarization) 과정이다. 국가와 자본이 서열화-차별-경쟁 메커니즘을 일상적으로 도입하면, 사람들은 배제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경쟁은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더 고단해지고, 불안정해지며, 그래서 더 불행해진다(마강래, 2016). 배제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과 기회를 이용해서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경쟁에서 승리하여 혜택을 받고 있

는 사람들도 다른 집단으로부터의 추격을 늘 걱정해야 하고 언제 다시 자시의 혜택을 박탈당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더 불안하다.

요컨대 생산관계에서 불안정화가 고용의 불안정과 저임금,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의 부족 등에서 오는 것이라면,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불안정화는 사회적 상호의존 관계 및 참여 기회로부터의 실질적 배제에서 발생한다. 생산관계 밖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각종 기회에서 제외되고, 공적·사적 호혜관계도 맺지 못하면서 생활이 더욱 위태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는 이주지들처럼 법·제도적 권리가 박탈되어 발생하기도 하고, 법적 권한은 있더라도 사회·문화적 인식 및 조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제가 발생하면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주어지는 자원, 혜택, 기회 등에 접근하기 어려워 배제된 사람들은 삶이 위태해진다.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화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불안계급의 ‘계급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모순적 의미를 갖는다. 배제 메커니즘은 이들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여 실존적 위기를 가져와서 저항의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의지와 공동체 활동 및 연대의식을 약화시켜 계급의식의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안계급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사회적 약자들이 대자적 계급으로 계급화하지 못하고 즉자적 계급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불안계급은 계급적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계급이 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다수의 불안정한 개인들의 집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노동계급이 생산현장에서 착취를 당하지만 공동의 작업장에 밀집하여 공동의 문제를 경험하며 비교적 쉽게 단결하고 계급화하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따라서 배제의 극복은 불안정화 극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계급으로 세력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공간적 배제와 불안정화

아직까지 불안계급 논의에서는 노동시장과 고용에 대한 논의에 비해 공간적 차원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고 간헐적으로 공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스탠딩은 신자유주의의 발호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각종 공공재의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공공재의 예로서 공공도서관, 공원과 같은 공유지(the commons)가 줄어들고 민영화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Standing, 2012). 또한 그는 이런 공공 공간의 축소가 불안계급의 삶을 더 위태롭게 하므로, 양질의 공간으로서 공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불안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Standing, 2012; 2014b; 2015).

공간적 차원에서 불안정화 과정은 공간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space)라는 배제 메커니즘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빈 장소인 공간을 사유화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Lefebvre, 1968). 공간의 상품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본의 일반적인 축적 논리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 맞물려 있다. 먼저 이것은 이윤 창출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자본의 고유한 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일찍이 르페브르가 간파한 바와 같이 자본축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상품생산의 장소로서 역할을 하던 공간 자체가 상품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aunders, 1986). 산과 강, 바다, 공기 등을 관광 상품화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간의 상품화는 스탠딩이 언급하고 있듯이 신자유주의하에서 도시의 많은 공공 공간들이 국가의 기능 및 제정의 축소와 함께 줄어들고 민영화되면서 확대된다. 민영화 및 상품화는 신자유주의 도시화론에서도 탈취에 의한 축적 과정의 하나로 제시되어 있는데,⁶⁾ 자본축적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상품

6) 이 외에도 탈취에 의한 축적의 요소들로는 금융화(financialization), 위기의 조작과 관리, 국가의 재분배 등이 있다. 이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에 대해서는 최병두(2009) 참조.

화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서 공동체 혹은 공공의 소유로 있던 공간도 예외는 아니다(Harvey, 2003; 2004; 2007).

공간의 상품화가 진행되면 구매능력이 떨어지는 불안계급의 도시 생활은 더욱 불안정해진다. 공공주택이 민영화되어 가격이 오르면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그동안 저렴하게 이용하던 공원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이 어려워지며, 대중교통의 이용요금이 오르면 모빌리티가 떨어져 직업선택의 자유가 줄어든다. 또한 양질의 공유지는 불안계급이 현 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투쟁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Standing, 2015). 따라서 이러한 공유지의 소멸과 공간의 상품화는 불안계급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런데 공간의 상품화 역시 크게 보면 배제가 공간적 차원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상품이야말로 공공재와 달리 배제성(exclusivity)과 경합성(rivalry)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기 때문이다. 공간이 상품이 되는 순간 오직 이를 구입할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제된다. 이를 통해 그간 공공 공간을 제공하던 국가와 지방정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자본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간 상품화는 소비 및 재생산 관계의 불안정화의 핵심인 배제의 한 가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불안정화 중에서 공간적 차원의 과정은 공간의 상품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배제의 공간적 표현에 불과하다.

도시에서 공간의 상품화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도시과정(urban process)은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과정이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미관의 개선, 공공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도시개발과 재개발은 개발자본에 의해 도시 공간의 사유화와 구획화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도시과정은 지대의 상승, 주거지 분리, 공공 공간의 축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다. 이러한 요소들은 공간적 배제의 핵심적 차원을 구성한다(박인권, 2015; 박인권·이민주, 2016).

먼저 개발의 결과 주거지의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구매력이 없는 이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주(displacement)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상승한 지대와 임대료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거주자들을 구매력에 따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주거지 분리(segregation) 효과를 낳는다. 주거지 분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사회적 낙인과 사회적 고립과 같은 문제를 겪게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의 결과 도시 공간은 외부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이 울타리가 쳐진 사유화된 공간으로 구획되어 공터, 골목, 광장 등과 같은 공공 공간이 줄어든다. 설사 공공 공간의 물리적 규모는 유지되더라도 사회적 표준에서 미달하는 사람들이나 행위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김동완, 2014).⁷⁾ 공공 공간은 구매력이 낮은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여가를 즐기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노점과 같이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공공 공간의 축소와 배제는 이러한 기회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것이 앞서 제시한 사회적 배제와 연결되어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고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7) 김동완(2014)은 공공 공간에서 이뤄지는 신체와 행위의 배제를 ‘권력에 의해 매개’된 동질화의 결과라고 본다. 그는 공공 공간의 ‘공공성’과 관한 여러 문헌을 재검토하고, 공공 공간의 공공성 복원을 위해서 권력의 매개 이전의 ‘날 것’으로서 공공 공간을 생산할 것을 주장한다.

4. 한국 도시 사회적 약자의 불안정성 분석

1) 한국의 불안계급에 대한 조사

스탠딩(Standing, 2012)은 불안계급에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들로서 여성, 장애인, 청년, 이주자, 빈민, 범죄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배제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돼 온 사회적 배제자들의 범주에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은 생산관계에서 박탈과 결핍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각종 비경제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각종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에서도 대체로 이 집단들은 노동과 생활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집단이자 사회적 배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은 각기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동질적인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통의 상태를 기반으로 공동의 저항이나 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 정부 민원, 집회 및 시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기 삶의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들을 주요 정책의 대상 또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향후 불안계급이 형성된다면 이들이 잠재적인 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한국에서 이들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불안계급과 사회적 배제자로 자주 언급되는 장애인, 청년,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도시빈민, 세입자, 노점상 등의 불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이들을 대표하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2017년 3월에 개별 접촉하여 연구의 취지와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4월에 이들을 상대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표적집단면접은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차 면접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청년, 이주여성, 도시빈민, 주거 관련 4개 시민단체의 주요 활

< 표 1 > 면접조사 대상자

| 구분 | 소속 | 인용표기 | 면접 일자 | 비고 |
|-------|-------------|------|-----------|-----|
| 청년노동 | 청년유니온 | A | 2017/4/12 | 활동가 |
| 이주여성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B | 2017/4/12 | 활동가 |
| 도시빈민 | 한국도시연구소 | C | 2017/4/12 | 연구원 |
| 청년주거 | 민달팽이 유니온 | D | 2017/4/12 | 활동가 |
| 이주노동자 | 성동의국인근로자센터 | E | 2017/4/13 | 활동가 |
| 장애인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F | 2017/4/13 | 활동가 |
| 세입자 |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 | G | 2017/4/13 | 활동가 |
| 노점상 | 빈민해방실천연대 | H | 2017/4/13 | 활동가 |

동가들이고, 2차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노점상 관련 4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다. 면접조사에서는 이들이 대표하거나 보호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성과 이들의 사회적 배제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 토론 등이 이뤄졌다. 사회는 필자가 직접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고 대략 3시간씩 진행하였다. 토론에 사용될 질문지는 2주 전에 발송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답변을 준비해오도록 하였으나, 서면으로 답변을 따로 받지 않고 현장에서 녹취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속과 활동분야 또는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 면접조사 일자는 <표 1>과 같다.

불안계급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이러한 조사는 이들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에 대한 직접조사라기보다는 간접적 조사에 가깝다. 물론 조사에 응한 활동가 상당수(A, D, F, G, H)는 본인 스스로 해당 단체가 대표하는 집단의 구성원이기도 하므로 직접조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집단의 일반 구성원이 아닌 단체 활동가를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후자가 불안계급의 대자적(對自的) 계급의식을 조사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일반 구성원은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하고 주관적으로 감정을 느끼는 즉자적(卽自的) 계급 상태에서,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객관화시켜볼 수 있는 대자적 계급의식은 갖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 불안정화 메커니즘이라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대자적 계급의식을 가지고 집단의 상태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고도의 객관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학술 연구자처럼 처지가 다른 제3자가 관찰과 반성을 통해 그러한 대자적 계급의식을 갖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대변하는 활동가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해당 집단의 문제를 조사함으로써 객관화된 계급상태에 대한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녹취된 자료는 필자가 반복해서 청취하면서 유사한 내용을 범주화하고, 이론과 개념의 틀에 맞춰 구체적 사실들을 이론적 시각에서 해석하였다. 개념 틀의 핵심적 요소들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진술은 직접 인용 처리하여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2) 한국 불안계급의 불안정성

한국의 불안계급 또는 잠재적 편입 대상자들은 생산, 소비 및 재생산 관계 전 영역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고용 및 생산관계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또는 실업과 저임금 등으로 인해 물질적 불안정성이 크다.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생산관계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소비와 재생산 영역으로 이어지고, 사회적 관계의 결핍과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도 심각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형태의 불안정성은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스트레스, 자괴감, 고립감,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먼저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과 생산관계에서 가장 큰 불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적집단면접조사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시민단체 대표들은 고용, 이와 관련된 소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는 데 동의했다. 고용기회의 차별, 불안정 고용, 낮은 임금 또는 소득, '감정' 노동, 낮은 복리혜택 등으로 많은 생계곤란과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청년세대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취업의 어려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취업 준비과정의 고립, 비정규직 노동의 열악함 등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불안과 부모세대와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청년노동 A). 아래에 소개한 전주의 한 청년 활동가의 고백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라북도의 시골에서 자라 인 서울(in Seoul)에 성공한 나는 전형적인 지방출신 도시청년이었다. 취업전쟁을 피해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스스로 피 말리는 수험생활에 지쳐 2년 만에 나가 떨어졌다. 뒤늦게 구직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신입으로도, 경력직으로도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고, 무엇보다 그 많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내가 ‘원하는’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 몇 번의 인턴생활 끝에 간신히 방송국의 프리랜서 작가가 되었을 때, 나는 그제야 그럴듯한 사회적 소속을 가진 전문직이 된 듯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었지만, 퇴근을 거의 못하면서 최저임금도, 4대보험 보장도 못 받는 고강도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해 나의 심신은 3년도 채 안 되어 망가졌다. 고민 끝에 서울생활을 내려놓고 고향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편안함이 아닌 ‘열패감’이었다. ... 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으로 싸워서 어떤 성취를 해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까? ... 나의 20대는 그저 괜찮은 일자리 하나 얻기 위한 투쟁의 시간, ‘구직난’에 불과했던가(오윤덕, 2017: 25).

이 경험담은 청년세대의 실업, 비정규직 노동, 결핍된 복리혜택, 열악한 노동조건 등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불안정성의 요인들을 잘 보여준다. 장애인들도 고용기회에서 겪는 차별과 배제,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등으로 인해 생계불안을 느끼고 있다. 장애인 근로자는 “노동시장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이 30~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장애인 F). 장

에인 의무고용률을 정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장애인을 잠시 고용했다가 다시 해고시키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 소득보장을 해주는 기초급여와 감면할인제도 등 혜택을 고려해도 중증장애인 1인 가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 원이 채 되지 않고, 이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한 비용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 “도시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장애인 E).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도 고용에서 느끼는 불안정성과 차별, 저임금 등은 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용주들은 이들의 언어능력이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을 하고,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보통 한국인의 80% 정도의 임금만 지급하며, 경력이 증가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만 주는 경우가 많다(이주노동자 E). 이주여성 중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경우에는 한국어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채용면접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고학력 여성이라도 모국에서 받은 교육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전문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주여성 B).

다음으로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 중에서는 주거불안이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사회 서비스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공평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의 소비와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지만, 주거문제는 아직까지 매우 불안정하다(도시빈민 C, 세입자 G). 주거비가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고, 최근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여 고용 및 생산관계에서 발생한 삶의 불안정이 소비와 재생산의 영역에서 더욱 악화된다. 또한 기본적인 주거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워지는 실정이다(세입자 G). 도시연구소의 연구원 C는 주거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높은 주거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일자리나 소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200만 원 월급 받아서 50~60만 원씩 주거비로

내면 빈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과 주거비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 주거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도시빈민 C).

임대주택 등 저렴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시원, 쪽방, 지하방, 옥탑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축사 등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외국인들의 주거는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하다. 심지어는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고용주가 기숙사비 명목으로 월 35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는 성폭력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어, 삶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된다(이주여성 B). 비닐하우스나 축사에서 생활하거나 컨테이너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국에서 비교적 넓은 집에서 살다 오는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충격은 매우 크다(이주노동자 E). 이주노동자 단체 활동가 E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달리 완전히 다른 사회적 문화에서 살다 왔는데, 공간적 측면에서도 충격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최장 10년 정도 한시적으로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집과 관련해서는 ‘지하방’, ‘옥탑방’에서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나’. 특히 지하든, 반지하든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대개 그쪽 사람들이 넓은 땅에서 살다 와서, 빛도 안 드는 곳에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상상을 못하는 거죠(이주노동자 E).

세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은 네트워크의 단절과 공동체 활동 부족 등으로 고립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해 정체성 위기를 겪는 등 사회적 불안정성을 경험한다. 보통 사회적 약자들은 주거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하지 않다 보니 네트워크도 약하고 공동체 의

식도 낮다(장애인 F, 청년주거 D). 사회관계가 약하다 보니 취업이나 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자기들의 문제를 함께 공유할 사람들도 없다. 더욱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려면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공원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공 공간도 부족하다(도시빈민 C).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은 박탈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매우 우울한 분위기이다(노점상 H).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은 자존감을 훼손하고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적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을 ‘낙오자’ 또는 ‘인생 실패자’로 여기는 사회 담론이 형성되어 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한다(장애인 F, 세입자 G). 임대주택단지 거주자들의 공간적 격리(segregation)와 부정적 사회 이미지도 상당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 효과도 크다(도시빈민 C, 장애인 F). “임대주택 출신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기도 싫어하는” 등 사회적 격리는 공간적 격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장애인 F).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낙인은 더 심하게 이뤄진다. 학교에서도 외국인 학생만 모아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사회적 격리가 일어나고(이주노동자 E),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주여성이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사례들도 많이 목격된다(이주여성 B).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웃관계, 상거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무시는 이들에게 정체성 및 자존감의 위기를 가져온다(이주노동자 E, 노점상 H).

5. 한국 도시에서의 불안정화 과정 분석

1) 사회적 차원의 불안정화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차원에서는 ‘참여’

의 부족과 ‘상호의존적’ 사회관계의 결핍과 같은 사회적 배제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서열화·차별·경쟁 메커니즘을 통한 배제가 작동한 결과이다.

먼저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각종 의사결정 과정이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참여하지 않아 삶이 더욱 위태해진다. 이주자들처럼 원천적으로 참여 권한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권한이 있어도 시간 부족, 권리의식 부족, 주위의 부정적 시선 등 때문에 스스로 참여할 의지를 갖지 못한다. 많은 경우 이주자들은 원천적으로 선거⁸⁾나 위원회, 정부 지원단체의 대표 등을 맡을 권한이 없다(이주노동자 E). 도시재개발에 관한 주요 결정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거의 참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세입자 G). 세입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 도시재개발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주(displacement)하는 등 주거 불안정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다. 세입자 운동을 벌여온 활동가 G의 발언은 참여의 부족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참여 문제를 얘기하자면, 상당히 배제돼 있죠 (세입자들의) 참여가 개발과정에서. 뉴타운 재개발 지역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전에 발표한 것도 (보면) 세입자 비율이 73%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70%가 세입자고, 30%만 소유자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개발사업은 세입자들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잖아요 결정권이 아예 없는 거고 그렇다고 30%, 거기 살고 있는 소유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70%, 외부에 살고 있는 여기에 살지 않고 있는 소유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마을의 개발인데 이 마을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린 거죠(세입자 G).

8) 2005년부터 지방선거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 국적 이주자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아직까지 피선거권은 없다.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갖지 못한다.

이 발언을 보면 세입자에게는 개발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권한 배분’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제적 의사결정 과정이 거주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재개발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 결과 세입자의 비자발적 이주와 같은 삶의 불안정성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도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도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거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어려운 구조이다. 민간인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도 위원 모집이 학회 등을 통해 이뤄져 대부분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위원회가 도시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를 보호하거나 이들을 대변하기 어렵다(도시빈민 C). 설사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구색 맞추기’ 혹은 ‘들러리’인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다(세입자 G, 도시빈민 C). 이런 식으로 형식적 참여와 전문가들에 의한 의사결정이 자꾸 이뤄지다 보니 사회적 약자들 스스로 참여의지를 누르고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지내게 되는 경우도 많다(장애인 F).

두 번째로 사회적 약자들은 ‘사회관계의 단절’과 ‘호혜 관계의 부족’ 등과 같은 ‘상호의존성의 결여’로 인해 삶이 더 불안정해지는데, 이는 ‘서열화-차별-경쟁’과 같은 배제적 메커니즘이 작용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는 “어떤 정상 내지는 표준화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되거나 배제”되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다(노점상 H). 이러한 차별은 고용과 생산관계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차별도 있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적 시선과 이미지, 사회적 낙인과 같은 비물질적 차별도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 활동가 E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서열화의 폐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차별도 층위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제일 위에 한국인 남성노

동자, 여성노동자, 그 다음이 조선족 남성노동자, 조선족 여성노동자, 그 다음이 중국 외의 제3세계 남성들, 그 밑에 여성. 이렇게 쭉. 임금도 그렇게 쭉 되어 있어요(이주노동자 E).

이 발언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서열화와 이에 따른 차별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주여성 단체 활동가 B가 들려주는 이주여성들의 사회관계 속에서의 위축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아이들이 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주) 여성들이 자기 이름 개명을 많이 해요, 국적을 귀화한 경우에. (그 전엔) 외국 이름을 한국어로 쓴 형태로 이름을 받아췄어요, 자기 뿌리를 지키고 싶으니까. 근데 주민등록증에 한국인이 아닌 티가 딱 나는 이름으로 써어 있으니까 바로 그게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장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을 해보고 나서 개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식 이름으로. 그게 사실은 아주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때 한국의 주류문화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여성들은 자기의 출신이나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숨길 거예요(이주여성 B).

이 발언은 내국인들이 이주자를 정당한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사적인 관계에서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불인정과 불수용, 차별을 경험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상호의존적 사회관계에서 멀어진다. 사회관계에서 멀어지면 취업 및 생활 정보 등 정보에 대한 접근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는 다시 삶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장애인 F).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계급적 단결이나 동질의

식을 갖기보다는 서로를 배척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차별과 배제에 익숙해진 이들이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주노동자 E). 또한 ‘사회 구조, 관행, 일상적 업무 행태, 규범’ 등과 같은 것들도 이들이 연대의식을 갖지 못하고 분열 또는 고립되는 데 일조한다. 노점상 운동가 H의 증언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어떤 정상 내지는 표준화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되거나 배제되죠. 대절도 이런 사람들끼리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하는 데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거리에서 장애인과 노숙인과 노점상이 싸우고 대결하는 (거죠). 우리가 싸운다고 해서 가진 사람들하고 싸울 일은 없어요, 볼 일도 없고 사회적 약자들 간에 서로 대결구도를 만들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런 (상황이 더 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점상들은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용역반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친구들이는데 당구장에서 할 일 없이 놀다가 (관에서) 부르면 가서 하루 일당 받고 싸우고 이런 거죠. 사실은 비극인 것 같아요(노점상 H).

이 내용을 보면,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관행’이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어떻게 저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들은 주류사회와의 관계에서 단절될 뿐만 아니라 약자들끼리도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적 관행도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다.

2) 공간적 차원의 불안정화

공간적 차원에서는 공간의 상품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과정이 ‘지대의 상승,’ ‘주거지 분리,’ ‘공공 공간의 축소’ 등과 같은

공간적 배제를 초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도시개발 및 재개발이 이뤄지면 한편으로는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 역시 일단 입주하기 어렵고, 입주해서 살더라도 저소득층들의 집중과 중산층 거주지와 공간적 분리로 인해 사회적 낙인과 고립과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 또한 도시 공간의 상품화를 위한 개발 역시 삶의 공간을 위협하고 공공 공간의 축소로 이어져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의 도시 개발 및 재개발 역사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다양한 주택에서 살던 마을을 한 번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어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입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주택의 유형이나 거주하는 가구의 사회계층이 획일화되는 과정이었다(세입자 G). 이런 과정에서 도시가 개발되면 노점상과 같은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저렴한 임대료도 줄어들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노점상 H, 이주노동자 E). 도시개발에 따라 도시빈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2003년에 시행된 청계천복원사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빈민운동가 H의 증언에 잘 나타나 있다.

청계천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복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야말로 집단적으로 이주하거나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고요.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로 이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든파이브가 완공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비용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3~4배 올랐어요. 처음에는 1억 이내에 입주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입주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가든파이브는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고요. ... 노점상은 그야말로 완전히 ‘땡땡’입니다. 축구공같이 동대문 축구장으로 이전시켜서 거기서 3~4년 정도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때쯤 되니까, 오세훈 서

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전 시장이 결정했던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게 된다. 또다시 풍물시장으로 이주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존권이 10년 상간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죠(노점상 H).

이 증언에서 보면 청계천복원사업이라는 도시개발이 ‘지대의 상승’과 ‘공공 공간의 축소’라는 공간적 배제를 초래하여 영세한 상인과 노점상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계천복원사업과 가든파이브의 개발은 서울시가 ‘장소 마케팅’이라는 공간의 상품화 전략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도시 어메니티를 증진하고 관광객 및 투자유치를 도모할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상품화는 지대 상승과 공공 공간의 축소라는 배제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를 위해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세입자 G, 도시빈민 C). 그래서 저렴한 주택이 밀집해 있는 불량주거지로 가서 살 수밖에 없고, 운 좋게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들만 고립되도록 설계된 분리된 거주지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적 낙인과 정보 접근의 한계,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을 경험하기는 마찬가지다(장애인 F, 노점상 H). 이러한 ‘거주지 분리’가 주는 삶의 불안정성에 대해 장애인 운동가 F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시라는 구조가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아니면 어디에서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임대아파트 쪽이랑 분양아파트 쪽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분양아파트 사람들은 임대아파트 쪽으로 오지도 않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장애인 분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 대개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시게 되고 그래요(장애인 F).

이처럼 ‘주거지 분리’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사회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공간적 배제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 이것은 다시 사회심리적 불안정과 각종 기회의 박탈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간의 물리적 개선사업 역시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업은 대단지 아파트 개발과 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소규모 갱생과 뒤이은 자본의 침투로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 공간과 일터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장소를 가꾸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로 장소의 가치가 상승하면, 이를 이용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자본의 진출이 이뤄지고 그 장소는 상품화된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재개발과 유사하게 임대료가 상승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다시 원하지 않는 이주를 해야 한다(노점상 H).

골목과 공터, 광장 등 공공 공간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이다. 공공 공간은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도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고, 여가를 즐기며, 필요한 정보를 얻고, 노점과 같이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도시개발에 따라 이런 공간들이 줄어들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정돈된 근린공원 등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길과 공터가 줄어들고 있다. 출입구를 통해서 거주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파트 단지들이 개발되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내에 학교가 만들어져 외부세계와 단절된 구획화된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도시는 점차 외부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늘어난다(장애인 F). 구획화된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교류를 하기도 어렵고 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워진다(이주노동자 E).

이처럼 공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배제가 사회적 약자들을 ‘투명인간’처럼 보이지 않게 은폐하는 결과도 낳는다는 것이다. 과거의 ‘달동네’나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던 주거지가 재개발되면서 도시의 빈곤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은폐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노점

상 H).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들의 고단한 삶도 함께 사라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고립되어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뿐, 그들의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된다. 문제는 이런 은폐가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성 문제의 공론화와 공개적인 접근을 막고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6. 결론

이 논문에서 우리는 도시 연구의 관점에서 불안계급 이론의 한계와 유용성을 검토하고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지는 과정 (precarization)을 이론화하고, 이 개념 틀을 한국 도시에 적용하여 이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불안정화 과정이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도시는 소비 및 재생산 관계가 집약된 물리적 공간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비생산 영역과 도시과정에 대한 이론이 필요한데 반해, 불안계급 이론은 고용과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공백으로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사회적 배제와 포용도시 논의가 유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이 이론들을 이용하여 도시의 불안정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의 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도시에서 불안정화는 사회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사회적 차원에서는 참여와 상호작용의 결핍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배제가 불안정화의 핵심이며 공간적 차원에서는 공간의 상품화 결과 지대 상승, 주거지 분리, 공공 공간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간적 배제가 불안정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념 틀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의 잠재적 불안계급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약자들 — 장애인, 도시빈민,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청년, 노점상 등의 불안정성과 불안정화 과정을 분석하는 데에 이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글에서 제안한 이론화와 개념 틀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 도시의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성과 불안정화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에 도달하였다.

먼저 한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 및 생산관계, 소비 및 재생산 관계 모두에서 상당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고용과 생산관계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가장 큰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불안계급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장시간 노동, 낮은 복리혜택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삶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의 불안정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데, 특히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거 불안정은 생산관계에서 발생한 불안정성이 그대로 소비 및 재생산 관계로 전이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역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고용 및 생산관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은 네트워크의 단절, 공동체 의식의 부재, 고립 등과 같은 사회관계의 결핍과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인한 정체성 위기 등 사회적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불안정성은 사회적 약자들의 심리상태에 스트레스, 자괴감, 불안감, 우울감, 고립감 등과 같은 심리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다음으로 한국 도시의 사회적 약자 불안정화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사회적 배제와 공간적 배제가 이들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임을 보여준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는 참여의 부족과 상호의존적 사회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진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도시개발 및 재개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어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에 따라 그들의 삶이 더욱 위태해진다. 사회적 호혜와 같은 상호의존적 사회관계의 결핍 역시 그들의 삶을 불안정화시키고 연대의식보다 분열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는 주로 서열화-차별-경쟁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적 메

커니즘이 작용한 결과이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 규범, 관행, 일상적 업무 행태과도 관련이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공간의 상품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과정이 지대의 상승, 주거지 분리, 공공 공간의 축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지대 상승에 따라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비자발적 이주를 경험하게 되고, 어렵게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더라도 주거지 분리에 따른 고립과 정보 단절, 사회적·문화적 네트워크의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골목길과 같은 공공 공간이 축소되고 도시 공간이 아파트 지역으로 구획화되고 동질화됨에 따라 활동영역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다. 이러한 공간적 배제의 결과 사회적 약자들은 도시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그들의 삶은 더 많이 위협받게 된다.

이론적으로 이 논문은 불안계급 이론과 사회적 배제 및 포용도시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결합하여 도시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불안계급과 사회적 배제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집단들을 설명하는 개념들로서 공통점이 많지만, 그 동안 이 두 논의는 서로 연결점을 찾지 못했었다(Munck, 2013). 그런데 우리는 이 논문을 통해 동태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인 사회적 배제와 이의 공간적 변형인 공간적 배제가 도시에서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불안정화(prekarization)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다. 불안계급 논의가 주체의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안정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사회적 배제와 포용도시 논의는 사회적 약자들이 불안정성에 이를 동태적 과정, 특히 소비 및 재생산 관계에서의 불안정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배제가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화 과정을 이끄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은 실천적으로 두 가지 모순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사회적·공간적 배제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여 불안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는 배제 자체가 갖는 속성으로 인하여 배제 메커니즘은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의지와 공동체 활동 및 연대의식을 약화시켜 대자적 계급의 형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한국 도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석에서도 실제로 확인된다. 이러한 불안정화의 모순적 과정으로 인해 불안계급 이론의 주장과 달리 불안계급이라는 ‘새로운 계급’의 형성 여부는 선형적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자각된 주체들이 도시에서 사회적·공간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때 사회적 약자들의 불안정성도 극복할 수 있고, 다양한 배경과 지위를 가진 이들이 연대와 협력을 위한 주체적 조건도 형성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 연구는 주로 개념 정립과 이론화를 위한 시론으로서 경험 연구 부분에 일부 방법론적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이 연구는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불안정화 하는 과정을 이론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험연구는 그 이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경험연구의 경우 면접조사 대상자가 활동가와 연구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지면 관계상 심층적인 분석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고접수일: 2017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4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2일

최종원고접수일: 2017년 12월 13일

❖ Abstract

Precariz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ity:
A Critique and Extension of The Precariat Theory

Park, In Kwon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Precariat theory and theorize the precariz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ity, and to confirm its validity by applying this conceptual framework to an analysis of Korean cities. I theoretically argue that the concept of 'exclusion' is at the heart of explaining the precarization in the relations of consumption and reproduction, which remains blank in the theory of Precariat. An analysis of interview data from activists of NGOs representing the socially weak corroborates that social exclusion and spatial exclusion indeed increase their precarity. In the social dimension, the lives of the weak are becoming more precarious due to the lack of participation and the lack of interdependent social relations. In the spatial dimension,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rocess involving the commodification of space leads to the rise of land rent, residential segregation, and reduction of public space, thereby precarizing the lives of the weak. In a nutshell, exclusion leads to the precarization of the socially weak, thereby creating the objective condition of the Precariat. However, exclusion also has the role of hindering the formation of class consciousness by weakening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and solidarity of the socially weak. This suggests that the overcoming of exclusion is a prerequisite for overcoming the precarity of the weak and for promoting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of this group.

Keywords: Socially disadvantaged, precarization, Precariat, social exclusion, spatial exclusion, inclusive city

참고문헌

- 강남훈. 2013.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2), 12~42쪽.
- 곽노완. 2012. 「인지자본주의 공동도시론의 변혁과 글로컬아고라 개념의 진화」.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144~171쪽.
- 김동완. 2014. 「‘날것’으로서 공공 공간과 타자의 복원: 로열 페스티벌 홀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24(3), 178~209쪽.
- 마강래. 2016. 『지위 경쟁 사회』. 고양: 개마고원.
- 박인권. 2015. 「포용도시: 개념과 한국의 경험」. 《공간과 사회》 25(1), 95~139쪽.
- 박인권·이민주. 2016.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공간과 사회》 26(4), 109~158쪽.
- 박인권·이민주·홍철·임인선. 2017. 「한국 도시의 포용성 진단과 유형별 특성 분석」. 《도시행정학보》 30(3), 111~130쪽.
- 오윤덕. 2017. 「지역과 청년을 위한 정책은 없다」. 『배운 대로 사는 세상은 지났다(서울시정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서울시.
- 이광일. 2013. 「신자유주의 지구화시대, 프레카리아트의 형성과 ‘해방의 정치」.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115~143쪽.
- 이진경. 2012.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대칭성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9(1), 173~201쪽.
- 정성진. 2013. 「프롤레타리아트에서 프레카리아트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10(3), 6~9쪽.
- 최병두. 2009.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발전, 그리고 종말? 신자유주의와 도시에 관한 데이비드 하비의 견해 재검토」. 《마르크스주의 연구》 6(2), 26~68쪽.
- _____. 2011. 「데이비드 하비의 지리학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한국학논집》 42, 7~38쪽.
- Aalbers, M. B. 2010. "Social Exclusion." in R. Hutchison (ed.), *Encyclopedia of Urban Studi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Atkinson, R. 2000. "Combating Social Exclusion in Europe: The New Urban Policy Challenge." *Urban Studies* 37(5-6), pp. 1037~1055.
- Banki, S. 2013. "Precarity of Place: A Complement to the Growing Precariat Literature." *Global Discourse* 3(3-4), pp. 450~463.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G.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Bristol: The Policy Press.
- Bourdieu, P. Darbel, A. Rivet, J.-P. & Seibel, C. 1963. *Travail et Travailleurs En Algérie*.

- Paris, France: Mouton & Co.
- Butler, J. 2004.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and New York: Verso.
- Castells, M. 1977. *The Urban Question: A Marxist Approach*. Cambridge, MA: MIT Press.
- Desmond, M. & Gershenson, C. 2016. "Housing and Employment Insecurity among the Working Poor." *Social Problems* 63(1), pp. 46~67.
- Dörre, K. Kraemer, K. & Speidel, F. 2006. "The Increasing Precariousness of the Employment Society: Driving Force for a New Right Wing Popu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Action Research* 2(1), pp. 98~128.
- Edwards, J. 1997. "Urban Policy: The Victory of Form over Substance?" *Urban Studies* 34, pp. 825~843.
- Fainstein, S. S. 2010. *The Just Cit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Frase, P. 2014. "The Precariat: A Class or Condition?" *New Labor Forum* 22(2), pp. 11~14.
- Gerometta, J. Häussermann, H. & Longo, G. 2005. "Social Innovation and Civil Society in Urban Governance: Strategies for an Inclusive City." *Urban Studies* 42(11), pp. 2007~2021.
- GUTIÉRREZ-BARBARRUSA, T. 2012. "The Growth of Precarious Employment in Europe: Concepts, Indicators and the Effec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55(4), pp. 477~508.
- Harvey, D. 2000. *Space of Hope*. Edinburg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 _____. 2003. *The New Imperialism*.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4. "The 'New' Imperialism: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Socialist Register* 40, pp. 63~87.
- _____. 2007. "Neoliberalism as Creative Destruc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0, pp. 22~44.
- Jehoel-Gijsbers, G. & Vrooman, C. 2007. *Explaining Social Exclusion: A Theoretical Model Tested in the Netherlands*. The Hague, Netherlands: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SCP.
- Johnson, C. G. 2011. "The Urban Precariat, Neoliberalization, and the Soft Power of Humanitarian Design." *Journal of Developing Societies* 27(3-4), pp. 445~475.
- Jørgensen, M. B. 2016. "Precariat—What It Is and Isn't: Towards an Understanding of What It Does." *Critical Sociology* 42(7-8), pp. 959~974.
- Lee, P. 1999. "Social Exclusion and Urban Policy: Identifying Deprived Communities." *New Economy* 6(2), pp. 102~106.
- Lefebvre, H. 1968. "Right to the City." in: E. Kofman & E. Lebas (eds.), *Writings on Cities*.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s.

- Lorey, I. 2010. "Becoming Common: Precarization as Political Constituting." *E-Flux Journal* 17(January), pp. 1~10.
- Munck, R. 2013. "The Precariat: A View from the South." *Third World Quarterly* 34(5), pp. 747~762.
- Neilson, B. & Rossiter, N. 2008. "Precarity as a Political Concept, Or, Fordism as Exception." *Theory, Culture & Society* 25(7-8), pp. 51~72.
- Nicholls, W. J. & Beaumont, J. R. 2004. "The Urbanisation of Justice Movements? Possibilities and Constraints for the City as a Space of Contentious Struggle." *Space and Polity* 8(2), pp. 119~135.
- Rodgers, G. 1989. "Precarious Work in Western Europe: The State of the Debate." in: G. Rodgers & J. Rodgers (eds.),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Brussels, Belgiu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Free University of Brussels.
- Rodgers, G. & Rodgers, J. 1989. *Precarious Jobs in Labour Market Regulation: The Growth of Atypical Employment in Western Europe*. Brussels, Belgiu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udies, Free University of Brussels.
- Saunders, P. 1986.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London: Bloomsbury Academic.
- _____. 2012. "The Precariat: From Denizens to Citizens?" *Polity* 44(4), pp. 588~608.
- _____. 2014a. "The Precariat." *Contexts* 13(4), pp. 10~12.
- _____. 2014b. "Understanding the Precariat through Labour and Work." *Development and Change* 45(5), pp. 963~980.
- _____. 2015. "The Precariat and Class Struggle." *RCCS Annual Review* 7, pp. 9~24.
- Waite, L. 2009. "A Place and Space for a Critical Geography of Precarity?" *Geography Compass* 3(1), pp. 412~433.
- Young, I. M. 2007. "Structural In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Justice, Governance, Cosmopolitanism,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Reconfigurations in a Transnational World*. Berlin, Germany: Humboldt University.